

광역단체장 대진표 완성... 'PK' 사활 건 대결

민주 "첫 단체장 배출" vs 한국당 "뺨발 사수" 당력 집중 경남지사 '드루킹' 변수로... 수도권 야권연대 여부도 관심

6·13 지방선거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는 단연 부산·경남(PK)지역이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두 PK를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지역으로 보고 이곳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의 첫 광역단체장 배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당도 대구·경북(TK)과 함께 전통적 '뺨발'인 PK 지역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는 '드루킹'(필명) 댓글 조작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가늠해보기 쉬운 지역이어서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한국당은 미리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며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과 김 전 지사는 2012년 19대 총선(김해울)에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선거는 김 전 지사의 승리로 끝나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이 설욕할지, 김 전 지사가 연승을 할지도 관심이

리다. 바른미래당은 경남지사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흔들 카드로 김유근 KB코스메틱 대표를 선택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리턴 매치'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국당은 서병수 현 시장을 각각 공천했다. 오 전 장관과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도 경쟁했다. 당시 오 전 장관은 무소속이었으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사실상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왔지만 고배를 마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부산시장 선거에 각각 이석진 전 의원과 박주미 전 부산시의원을 내보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인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와 한국당의 김기현 현 시장이 한판 대결을 펼친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수도권 지역도 대표적 격전지로 분류된다. 서울시장 선거는 3선

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시장(민주당)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한국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바른미래당)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치열한 대결이 예고됐다. 특히 안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적이 있어 이번 선거가 더욱 주목된다.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한국당 남경필 현 지사가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남춘 의원(민주당)과 유정복(한국당) 현 시장이 자웅을 겨룬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보이지만, 야당 후보들도 역전을 노리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를 시도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군수 후보

문인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기원"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45만 북구주민들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강상태에 있던 광주 남북교류사업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며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팀 참가가 성사되어 남북정상회담이 광주수영대회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남북 교류·협력에 활발히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범죄로부터 안전한 북구 건설"



이은방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북구 주민의 32.2%가 범죄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문제점을 찾아 하나씩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구 주민들의 야간보행권 확보를 위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가로등 정비사업'을 펼치겠다"면서 "북구 주민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것은 북구청장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조상래 전 도의원 평화당 곡성군수 후보 확정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인 민주평화당 곡성군수 후보로 확정됐다.

조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37.35%를 얻어, 이영진 예비후보(24.3%)를 따돌리고 곡성군수 후보를 확정지었다.

조 예비후보는 "많은 사회 활동과 두 번의 도의원, 한 번의 곡성군의회를 지낸 의정 경험으로 곡성의 재정 여건이나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곡성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잘 알기에 당당하게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세계적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군이 책임지는 교육정책, 복지곡성 건설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 신안군수 예비후보들 "경선 즉각 시행을"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경선 보류를 두고 예비후보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석배·임흥빈 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들은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단체장 공천이 보류되고 있다"면서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당이처럼 커져만 가는 실체없는 전라공천철로 군민과 당원들의 동요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특정 무소속 후보와의 밀약설 등 온갖 음모설이 가세하면서 지역민심이 폭발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했다. 4명이 출마한 민주당 신안군수 경선은 지난 8일 전남도당의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 이후 보류지역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대표 실 부실장을 지낸 천경배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당 전남지사 후보 민영삼 최고위원 유력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민영삼 최고위원이 잠정 결정됐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발목이 잡혀 박지원 의원 등 현역 의원 차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민 최고위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2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4월 말까지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서 "교섭단체 문제로 현역 의원을 내세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치에는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본 뒤 4월 말이나 5월 초께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최근 영입된 민 최고위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 최고위원은 목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한양대와 건국대 특임교수 등을 지냈으며 종편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사평론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평화당은 이날 제3차 선대위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댓글 조작, 구청장 예비후보 폭행,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 잠을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장은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원·단체장 선거에서 평화당 후보를 뽑아야 호남지역 발전이 이뤄진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호남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호남을 버린다"면서 "호남이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호남이 평화당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헌 논의 재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25일 국회에서 야 3당 개헌 공동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천정배,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희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개헌 불씨 살리기'

3야 헌정특위 공동입장문... "민주·한국당 협상 재가동해야"

6월 개헌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여당도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했지만 "개헌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다"며 개헌 논의에 문을 닫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 및 헌정특위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여

권과 한국당을 향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야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며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며 "거대야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한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 당분간 개헌 논의는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계속된 개헌 논의 주장에 응할 뜻을 비취 잠시 냉각기를 거친 후 개헌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의 태도가 변화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투표법 통과 조건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